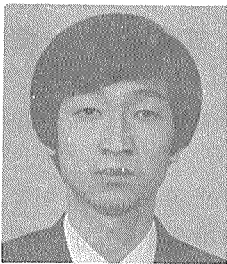


世界經濟秩序의 變化와 韓國經濟의 進路



권혁기
럭키금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전환기에 놓여있다. 한마디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걸프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지나 않을까 가슴 졸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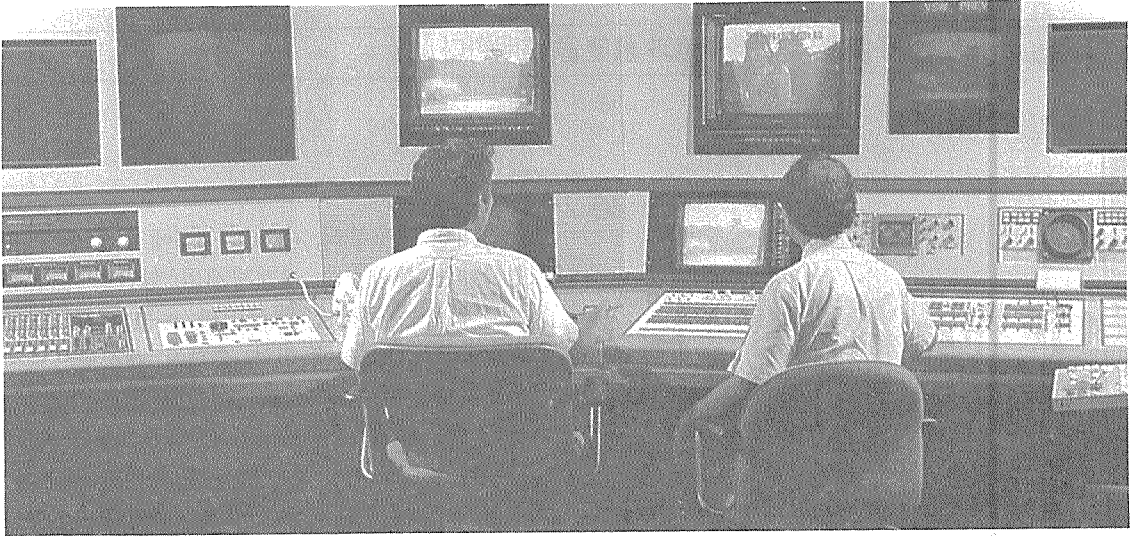
신미년 벽두부터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유혈사태는 불확실한 세계경제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해 주는 듯하다. 「사막의 폭풍」으로 명명된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개시됨으로서 걸프사태는 마침내 戰爭으로 치달았고, 蘇聯에서는 발트해 연안 공화국들의 독립요구를 연방정부가 流血로 진압하는 事態를 빚기도 하였다.

'89년 12월 지중해의 몰타에서 미국·소련의 양대정상이 냉전종식을 선언했을 때 벽찬 희망과 기대가 국제사회에 넘쳤다.

실제로 '90년에는 독일통일, 파리평화협정 채택 등으로 민주화, 화해가 진척을 이루어 「平和의 時代」가 예견되었었다. 세계전체 또한 80년대 후반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완만한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이제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바뀌어 지고 있다.

현재 우리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들은 한마디로 구질서가 완전히 청산되어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여 준다고 하겠다. 민족간 또는 국가간 이기주의의 돌출로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최종적 결과가 어떻게 결말지어 지느냐에 따라 세계경제의 진로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기들 가운데서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걸프전쟁이다. 지난해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強占으로 시작된 걸프사태는 급기야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현재로서는 전쟁이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결말이 날지 혹은 그이상 중장기전의 양상을 띠게 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국제유가는 단기전으로 끝나거나 장기화 되더라도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유전시설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종전이 된다면 배럴당 20~25달러 수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경제력은 근본적으로 기술력에 달려있다.

이 경우 세계경제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화될 경우에는 현재 세계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미루어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걸프전쟁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세계질서의 변화다. 다국적군에 대한 무모한 전쟁을 고집하고 있는 이라크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볼 때 걸프전 이후 중동 및 세계의 신질서는 미국주도하에 재편성될 수 밖에 없으며 미국의 개전 결단 역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대항세력을 이끌었던 소련은 동구사태 이후 극적인 해체현상을 겪고 있으며 미국 또한 경제력의 쇠퇴로 주도권을 잃어 가는 듯 했으나 이번 걸프전을 계기로 미국에 대신할 만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미국이 불확실성 속에서 걸프전 수행의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지역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 자국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분쟁의 해결과정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강대국의 지위를 재구축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측의 이러한 의도는 1월 29일 부시 미대통령이 상하양원 합동의회에서 발표한 年頭敎書에서도 분명해진다. 부시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1世紀는 미국의 世紀임을 재삼 강조하면서 미국이 이끌어 갈 팍스아메리카(Pax-America)를 제창했다.

이는 양극체제가 무너진 후 앞으로의 세계평화는 미국의 독자적인 힘에 의해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질서를 주도할 의지와 자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라크가 패배한 후 중동이 어떻게 재편성될 지, 그리고 세계경제질서가 어떤 청사진을 따라 형성될 것인지 지금으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각국이 다국적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전후에 예상되는 여러 형태의 경제적 이권배분에 참여하겠다는 계산 외에도 최소한 세계의 경찰역을 자임한 미국으로부터 소외당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역사가들은 지난 수백년간 타국을 압도하는 해양패권국이 1세기 간격으로 출현, 그후 25~50년간 그 패권국 주도의 국제체제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는 사이클이 형성돼 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패권국은 언제나 막강한 경제적 생산력과 생산성·군사력 체제를 지탱하는 통신정보네트워크 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걸프전 이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력과 정보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력과 생산성을 회복할 것인가가 냉전 이후 패권 유지에 관건이 될 것이다.

다음은 소련문제다. 지난해 12월 하순 세바르드나제 外相이 “독재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며 돌연 사임을 발표함으로써 보수우파의 대두를 경고한 바 있었다. 그리고 세바르드나제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인민대표회의는 대통령의 권한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연방권력 개편안을 승인, 보수우파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켰으며, 개혁을 주도해온 아코블테프, 등 7인의 보좌관이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구성공화국들의 민족주의적 요구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는 내용의 새 연방법을 강요함으로써 공화국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1월 13일에는 리투아니아의 독립요구 시위대를 소련군이 무력진압, 15명의 사망자와 230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1주일도 못가 리트비아공화국에서 낙하산부대가 군중에게 발포해 5명이 사망하는 流血事態를 빚어냈다.

이제 소련은 연방의 해체라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각 공화국에 “새 연방법 서명을 강요한다 해도 연방의 붕괴를 막기 힘들뿐만 아니라 그 과정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러시아공화국 밖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의 수는 약 6천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공화국들이 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선언하고 이들이 러시아공화국으로 돌아올 경우 엄청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소련의 경제는 이미 파산상태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소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중대한 상황변화는 바로 냉전종식 이후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중요한 변수가 작용할 것이다.

'89년 여름 출간돼 화제를 모았던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歷史의 終末」이라는 책은 인류의 이데올로기적 진화가 이제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후쿠야마는 자유주의는 공산주의를 비롯한 모든 체제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지구상의 기본 모순들이 해소돼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2년전에 이미 끝났다고 주장한 역사는 역사의 章이지 역사 그 자체는 결코 아닌 것 같다. 구질서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 질서를 세우는 것은 그리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구질서는 더이상 가능하고 있지 않으며 새 질서는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태다.

서방세계 또한 문제가 많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방세계의 성장문화는 사실 지난해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야기된 유가인상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뉴욕과 런던에서 부동산 시세가 폭락하였으며 이와 함께 금융시장과 주 택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다.

일본의 위세당당하던 은행들은 중앙은행의 대출규제, 국제경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걸려 세계금융시장으로의 자금공급을 줄이고 있다. 금융부문에서의 세계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모든 惡村은 순식간에 전세계로 그 영향을 미친다. 통일후 독일금리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요청에도 아랑곳 없이 오르기만 하고 있으며 미국경제는 침체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종식이후 서방세계에 대두되고 있는 보다 중요한 문제는 平和의 配當문제다. 걸프전쟁의 전비분담에서도 나타났듯이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경제적 부담을 결코 자신들만 지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은 앞으로 5년간 매년 군사능력을 5%씩 감축해서 적자요인 가운데 900억달러를 줄인다는 시산을 갖고 있거니와 미·소의 균축이 세계 GNP를 평균 0.2~0.3%씩 늘려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세계경제가 이런 새로운 확대균형의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점과 세계富의 日本偏在다. 지난해 소련의 경제개혁에 관한 「사할린案」에도 「세계자본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經協…」이라는 구절이 있었다. 오늘의 세계경제 한가운데에 세계富의 일본편재라는 불균형이 가로놓여 있으면서 이것이 앞으로 세계경제의 구조와 순환에 결정적인 영향

을 두리라고 보는 것이다. 미·소가 균비경제를 벌여온 끝에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하려는 데서 脫冷戰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할 때 이런 미·소의 피폐라는 맞은편에 일본으로의 세계富의 현재라는 貨造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같은 어두운 상황들로 인해 세계경제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그 전도 어둡기만 할 것인가? 동서맹전이 끝남으로서 세상은 오히려 더 불안해 진 것인가? 여러가지 요서를 고려해 볼 때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비롯 몇가지 위협스럽고 불안한 사건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세계경제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확대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걸프전쟁은 얼마동안 갈 것인가가 문제일 뿐 후세인에 대한 세계의 압력은 후세인의 계기로 결말지어질 것이다. 지금 제3세계에는 이라크를 제외하곤 어떤 나라도 서방세계를 위협, 미국으로 하여금 50만명 가까운 엄청난 병력을 분쟁지역에 파견하도록 강요할 만큼의 실력을 갖춘 나라도 없다. 소련, 동구의 불안도 소련, 동구인 등 자신에게 악몽임이 분명하지만 그것도 종래의 사회체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체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과도기적 진동으로 파악될 수 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전 세계적으로 사멸해 가고 있으며 그 여파로 사회주의권에 불안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으나 과거처럼 아시아·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호전적인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국가안전을 위협받는 불안한 상황으로 복귀할 것 같지는 않다.

만약 이러한 과도기적 문제들이 잘 극복되어 진다면 세계경제는 80년대초 오일쇼크 극복 이후 그랬던 것처럼 안정된 성장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릴 수 있다. 작금의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轉換期에 놓여 있다. 한마디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걸프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지나 않을까 가슴 졸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다행히 유가

가 안정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대외 의존적인 우리의 경제현실을 실감해야만 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3대지주도 흔히 성장과 물가 그리고 국제수지를 든다. 먼 우리경제의 상황으로는 3가지 모두 낙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90년의 경제 성장률은 9%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내실없는 성장임이 드러난다.

성장을 지탱했던 것은 건설과 소비부문이었으며 그동안 우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제조업과 수출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수출의 부진은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경상수지가 4년만에 다시 적자로 반전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말았다.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였던 것이다. 이 와중에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다. 90년에 9.6% 상승 하였던 소비자물가는 금년 1월중에만 2.1%나 폭등하였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떠오르는 용」으로 찬사를 받았던 우리경제가 용이 되려다 만 지렁이」까지 평가절하된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관성이 있었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의욕 상실을 돕기도 한다. 국민의 과소비풍조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하였음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들 실행에 옮기려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誌는 한국경제 특집기사에서 한국과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인내심이며, 한국민은 장기적 문제를 단기적 시각으로 접근한다고 꼬집은 바가 있다.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개발과 에너지절약형산업으로의 이행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또 정부 혼자서 뛰어서도 기업만 열심히 돈을 댄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풍토하에서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것은 價値觀의 문제이며 한국경제의 향후 진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열쇠일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냉전시대의 새로운 질서 창조의 원동력은 경제력에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그 경제력은 근본적으로 기술력에 달

려 있음을 선진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技術力의 強化, 이것은 우리경제가 선진국을 지향하는 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임을 정부, 기업, 모두가 새로이 인식하여야 한다. 걸프전쟁에서 사용되는 최첨단 兵器를 부러워만 한다거나 일본의 기술력에 찬사만 보낼 때가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AEA 후원 전자기술 전람회(CardTech, SecurTech) 안내

본회와 업무 제휴관계에 있는 AEA(미국 전자협회)가 후원하는 전자기술 전람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가 및 참관을 바라며 상세한 사항은 본회 국제부로 문의바랍니다.

- 전시회명 : Card Tech, Secur Tech
- 기 간 : '91. 4. 15~4. 17(3일간)
- 장 소 : 하얏트 리젠시 크리스탈시 (버지니아)

• 주요전시내용

Card Tech : Card Technologies: Advancing the State of the Art, Introduction to Advanced Card Technologies, Card Technology in Japan and the Pacific Rim, Applications and Consideration of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Systems, The World of

Memory Cards, The United States and Smart Cards: A look at the Issues, The World of Optical Cards, European Card Applications, The World of Smart Cards, The Public Sector and Card Technology,

Secur Tech: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Biometrics Technology and Applications, Card Integrity and Security, Electronics Photoimaging and ID, Intelligence Systems and National Security

- 세미나 : '91. 4. 15~4. 17
- 전시회 : '91. 4. 16~4. 17